

농촌지도직 공무원 지방직 전환의 문제

김 성 수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Problems in Localization of Extension Educators in Korea

Sung Soo Kim

College of Agriculture & Life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ummary

Since 1997, Korean government changed the status of extension educators from central government staff to county/city government staff for the sake of democratization and localization, regardless of opposition of academic society of extension professionals.

Localization of extension educators followed by government restructuring in Korea, resulted various problems, such as 1) Decreased morale and number of extension educators, thus weakening the extension educational function, 2) Weakened linkages between national and local extension offices, 3) Less opportunity for in-service education of extension educators, 4) Weakened linkages between agricultural research and extension, etc.

During the last 30 years, extension services have helped Korean farmers in achieving self sufficiency of rice and year around supply of green vegetables by diffusion of vinyl house technology. Various problems after three years of localization of extension educators were discussed between announcer of radio KBS and a professor of extension in an interview format, and it was concluded that national efforts should be needed to restore morale of extension educators to continually achieve the national goals of food productio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of environment, at the same time to meet increasing needs of farmers.

농어업계 초점입니다. 오늘은 농촌지도직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봅니다.

농촌지도직이라고 하면, 각 도와 시, 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한 여러 기관들에 농업 분야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앙공무원의 신분으로 일관된 체제를 유지했습니다만, 지금은 지방자치제로 이런 기관들이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제 시대에 조직구조상에서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도 있겠지만, 비효율적인 면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김성수 교수와 함께 이 문제를 짚어봅니다.

1. 우선,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은 누구입니까?

농촌지도직 문제를 밝아오는 새아침의 주제로 정하시고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저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민과 함께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농촌지도직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뜻을 먼저 전하고자 합니다.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은 농업 기술, 농업경영 기술, 농촌 생활 기술을 농민들에게 전파 교육하여 농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농민의 선생님, 자문, 코치, 상담역, 친구입니다.

농촌지도직은 농업 농촌의 현장에서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수집하여 농업인에게 전달하여 과학영농 및 생활개선을 실천하게 하는 공무원으로서 농촌지도직과 생활지도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70년대 녹색혁명을 성취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이 쌀을 자급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80년대에는 백색비닐 혁명으로 우리가 언제나 채소 등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농촌의 현장에서 농업인과 함께 하는 농업인과 농촌청소년에게는 가장 친숙한 선생님이고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생활지도직은 농촌 부녀자와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이 분들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소속이 변경되었는데, 어떤 이유로 변경되었습니까? 지방자치제 시대의 흐름입니까?

지방자치제의 영향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제라는 것이 무조건 국가직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특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즉 식량을 생산하고 보급하는 역할과 지방지치화의 논리와 맞부딪칠 때 우리나라는 무조건 지방지치제가 실시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하였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시군에는 무조건 국가직을 두지 않는다는 논리 하나로 모든 시군에 있는 지도직공무원들이 지방직으로 전환된 것이지요.

이 분들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소속이 변경될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기 보다는 “변화와 개혁”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지방화 시대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

로 94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잘 못 변환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 국가공무원을 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둘 수 있었던 것을 지방자치법 제103조 4항에 의거 법률에 의하여만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조항은 94년말 법률이 제정되기까지는 대통령령의 규정을 받도록 경과조치를 두었고, 95년 1월 부터 적용하도록 개정하였고,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거 농촌 지도 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계속 남아 있으려면 제정 예정인 법률에 포함되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였고, 차관회의를 거친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안이 94년 개최된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도 농촌진흥원 소속의 179명만 국가직으로 존치하고 시군 농촌지도소 소속의 지도직공무원 전원은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94년 12월 국회의결을 통하여 공포되었으며 동법 시행령인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이 94년 12월 제정되면서 시행령에 도별 직급별 국가직 존치인원을 명시하였으며 지방공무원 전환으로의 연차별 일정만 조정하여 급작스런 지방직 전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1997년 1월부터, (농촌지도관 504명, 농촌지도사 5,492명, 생활지도사 700명, 농업연구사 628명) 등 총 7,324명이 지방직으로 전환되기에 이르렀습니다.

3. 농업분야의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까?

긍정적인 면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지방에서 자기의 지역에 알맞는 사업의 추진이 용이하다는 등의 장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이 먹는 식품을 생산하는 일이 지방화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임

니다.

지방화로 인하여 지방조직과 인력을 조정할 때 1차산업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인력이 줄어들었고, 중복투자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지방화 못지 않게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정보를 교류하여야 하는데 정보교류가 멈추어 버렸습니다. 서로 다른 자치단체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선거직 시장 군수에 의해 임용되기 때문에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소장들은 시장 군수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실정 등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직으로 전환시키려는 여러 가지 징후가 보이기 시작한 94년부터 농촌지도에 관심 있는 많은 학자들과 지도공무원, 유관기관·단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방법 등이 모색되어야 하겠다는 의지로 한국농촌지도학회를 창립하고 이 때부터 농촌지도직공무원의 지방직전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 여론 등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으며, 관계 부처와 국회 등에 건의 하였으며, 그 주요 논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전환시킬 경우 농촌지도기능의 전문성 약화 및 소멸 가능성이 짙음
 - 자치단체장의 관심이 가시적인 사업에 두게 되므로 지도기능 소멸 우려
 - 조직은 한 번 소멸되면 복구하는데 5~10년 이 소요됨
2. 지도직의 신분상 불안으로 사기가 떨어지고 후유증 장기화 우려
 - 지도직의 소외의식과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은 무원칙의 인사가 예상됨
 - UR 대응을 위한 지역농업의 경쟁력 확보에 차질이 예상됨
3. UR 이후 WTO체제하의 무한경쟁시대 대응 차질
 - 농업연구와 보급지도의 이원화로 기술농업 실현 곤란

- 지도사의 전문화를 위한 지속적인 신기술 습득 제한
4.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에 차질
 - 종자공급, 병해충 방제, 신기술 보급 등에 혼선 예상
 - 국가에서 기간작목으로 육성해야 할 쌀 등 일부 품목의 수급 차질 우려
 - 구 소련 등 일부 국가에서도 식량 부족으로 국가 자체가 붕괴되었음
 5.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비 42조원, 농특세 15조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곤란
 - 중앙의 계획에 농촌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 예상
 - 농민에게 자금만 제공하고 기술은 제공하지 못하여 실패가 우려됨
 6.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농촌지도사업 재원에 변동이 없음
 - 현재로서는 자치단체의 인건비 부담 능력이 없음(연간 1,500억원)
 -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 단체의 부담 가중으로 지도사업 위축 우려
 7. 농촌지도공무원의 전문 정예화에 역행
 - 농촌지도직의 사명과 긍지보다는 행정직화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 전문적이고 능력있는 사명감이 투철한 우수한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 농촌지도사업은 후퇴하고, 따라서 농민들의 좌절은 더욱 커질 것임
 8. 유예 규정(3~5년)을 들 경우
 - 젊은 지도직공무원이 행정기관으로 전직하기 위하여 수단을 동원하는 원인 제공으로 농촌 지도기관이 기강이 해이될 것이며
 - 모처럼 되찾은 농촌지도사업의 활기가 다시 침체되어 농민들로부터 신뢰는 더욱 떨어지게 될 것이고
 - 따라서 농민의 동요를 불러 일으켜 후유증이 매우 클 것임 등입니다.

농촌지도직공무원의 지방직 전환 논의에 따라 일선 농촌지도공무원들의 동요가 있고 지방직 전환에 반대하는 여론이 있을 때, 94년 9월 전국 농촌지도기관장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당시 대통령은 “여러분들은 전국의 농촌을 어떻게 살리느냐 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분들로, 여러분들이 바로 설 때 우리나라는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과 같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촌이 이만큼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랑스런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농촌 발전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특히 '97년 일선 농촌지도공무원들이 지방직화 되더라도 일체의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나, 지역간 농업정보교류가 차단되고 기초단체장의 인사권 남용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 농업기술 보급 업무가 더욱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현장의 당사자들은 어떻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지방화 된다고 하니까 농촌진흥청의 간섭을 받지 않게 되어 좋을 것으로 일부에선 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고 특히 세금을 걷는 일 등 행정업무에 동원되다 보니 농민을 만나서 지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농민의 원성을 듣게 되는 등의 역할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힘이 없는, 이권이 전혀 없는 공무원들이 되다 보니 지방직 전환이전까지는 국가직이라는 긍지하나라 살아왔는데 사기가 많이 떨어지고 사명감과 의욕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안 농촌지도사업의 조직과 인력은 지방자치단체 조직에 국가공무원이 근무하는 독특한 형태로 이루어져 국가와 지방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직으로 전환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

도공무원의 기구와 정원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선 지도공무원들은 신분에 불안을 느끼는 가장 큰 요인이 되었고,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 사명감 저하, 의욕 상실 등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인사권의 일체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귀속됨으로써 시장·군수의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관심과 의지 여하에 따라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5. 이제 시행된지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시점에서 과거와 비교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인력관리 문제를 우선 거론하여 보면, 농민들의 입장에서 능력과 자질이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소장 및 과장에 임용되는 등의 문제가 있고, 인력감축의 우선 대상이 되고 있으며, 농민들에게 가장 친근한 읍면의 상담소는 900여개소가 폐지되는 등 실로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방비가 많아서 지방에 맞는 사업이 잘 수행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군의 재정 자립도를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은 “농촌진흥법”에 의하여 사업이 추진되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의 통제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관되어, 지방에서 국가의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적절한 통제 수단이 없다는 약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지방직 전환 이후 최근 몇년동안 나타난 주요 변화는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사기 저하, 지역간 농업정보교류가 차단, 기초단체장의 인사권 남용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 농업기술 보급업무가 더욱 위축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조조정 이후 50% 이상의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대부분이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비전문가가 선임됨으로써 농촌지도업무 공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지자체가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 이후 정원을 채워주지 않고 있고 향후 정부 구조조정 방향이 총정원 개념으로 바뀔 계획이어서 농촌지도 전문인력 공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6. 문제점이나 부작용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농민을 위한 서비스 체계에서 어떤 효율성을 거두는가 하는 것 일텐데요.

정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도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농민을 위한 서비스인데 국가와 농민을 직접 연결하는 최일선의 국가 공무원 집단인 농촌지도직의 신분을 바꾸어 사기를 떨어뜨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권리 신장에 도움이 되지 않고, 부담만 가중시키면서, 농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능을 혼란에 빠뜨려 농촌지도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워 농민에게 농민을 위한 서비스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자치단체장의 관심에 따라 농촌지도사업이 축소되면서 농민을 위한 서비스는 더욱 어렵게 되고, 기술농업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 농업연구개발 및 지도 역량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또 형평성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즉,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의 농업인들은 농촌지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농업인도 납세의 의무를 완수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의 일원인데 세금은 내면서 인근의 농업인과 비교하여 기술정보는 물론 시범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전주시의 경우 작년에 농업기술센터를 폐지하고 농업행정과 통합하였습니다. 1년에 몇억원 이상의 국비와 도비가 농업인들에게 시범사업을 통하여 농업발전을 기하고 있었으나, 폐지된 이후로는 전혀 사업비가 없습니다. 이를 농업인들이 알고

시장에게 항의를 하고 있고 곧 다시 설치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는 한 예에 불과 하지만 전국의 10여 개소에는 농업기술센터가 없는 시군의 농업인들은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없는 시군에 설치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1명의 농업인이라도 제도의 잘못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마음이지요. 어느 한 개인이라고 피해를 본다면 민주국가의 평등의 원칙에 벗어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7. 그렇잖아도 농업 분야에서는 어려운 환경이 계속되고 있고, 뒤떨어진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막대한 과제를 어떻게 달성하느냐 하는 것이 농업의 존폐를 가름하는 것인데, 정부에서 이런 일들을 너무 쉽게 처리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과 함께 농업분야에 대한 관심이 너무 소홀하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국민 식량과 관련된 주요한 문제를 학계나 전문가의 토론을 거친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경청하지 않고 “너무 쉽게, 너무 빨리 처리하면서 농업분야에 대한 관심이 너무 소홀하다는 지적들”에 공감 할 수밖에 없음이 안타깝습니다.

농촌지도직공무원의 지방직 전환 논의에 따라 일선 농촌지도공무원들의 동요가 있고 지방직 전환에 반대하는 여론이 있을 때, 94년 9월 전국 농촌지도기관장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당시 대통령은 “여러분들은 전국의 농촌을 어떻게 살리느냐 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분들로, 여러분들이 바로 설 때 우리나라는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과 같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촌이 이만큼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랑스런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농촌 발전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특히 '97년 일선 농촌

지도공무원들이 지방직화 되더라도 일체의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나, 지역간 농업정보교류가 차단되고 기초단체장의 인사권 남용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 농업기술 보급업무가 더욱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라는 막연한 논리로 우리의 농업을 포기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가 그렇게 발달하였어도 시군 농업기술조직을 시장군수에 마음대로 만들어 놓지 않았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전체적인 국가체계에서 1명의 농업인이라고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배려이지요. 또 그것이 당연하고요. 지방자치제를 하면서도 도단위로 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훨씬 효율성이 높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소한 문제라도 진지하게 생각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모두가 국가정책만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조그마한 부문이 합하여 국가정책이 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8. 잘못된 것은 빨리 바로잡아야 하는데, 이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보완을 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단순하면서도 쉽지는 않은 문제 같은데...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국가직으로 환원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국가공무원을 둘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서만 둘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을 개정하면 간단히 국가직으로 환원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제청권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도지사 소속으로 광역화하는 방안입니다. 일본과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모든 시군의 농업기술센터가 시장 군수에 소속되지

않고 도지사에게 밑에 설치하면 지방자치화와 더불어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9. 농촌지도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면 어떤 걸 들 수 있습니까?

농촌지도직의 문제는 1962년 농촌진흥청이 설치되면서부터 태동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행정기관으로 설치하였으면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 데 지방의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시장 군수 소속하에 설치하였고, 인력은 국가직으로 하여 이중적인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력관리는 농촌진흥청에서 하고 있다가 1997년 지방화 조치로 인하여 지방직으로 전환하면서 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농업의 문제는 경쟁력을 따져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길 일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지도직에 대한 접근 자체도 국가에서 확실히 책임지고 해결한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10. 모든 조치들이 결국은 우리 농업을 위한 일이고, 농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 기회에 이런 농업관련 조직들의 운영에서 효율적인 방향도 같이 짚어주신다면?

농업의 경쟁력은 규모면에서 보면 절대로 우리가 선진국의 농업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오직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기술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을 바탕으로 한 우리 농업의 실천은 곧 농과대학과 농촌진흥기관을 주축을 하여 연구하고 노력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행정에서는 행정으로서 업무가 별도로

있고 농업기반공사는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습니다. 서로의 영역에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는 물론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미래는 농업에 달려 있습니다. 국가의 흥망이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식량없이 하루도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 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촌지도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격려와 제도적인 뒷받침이 하루 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망의 새 천년 21세기, '정보화시대' 등의 용어들은 마치 농업의 시대가 끝나고 온 세상이 컴퓨터와 인터넷, 벤처 기업 등이면 먹고 살 수 있는 것인양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선 식량이 필수적이며, 식량 생산은 농업에 의존해야 할 것이며,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도 농민들이 '먹을 것'을 생산하도록 국가적 지원이 없으면 '초고속통신망'도 환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21세기 인류에 대한 진정한 위협은 핵전쟁이 아니라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간의 분쟁이며, 전 세계적으로 8억명이 가난과 영양실조로 신음하고 있으며, "기아와 영양 부족으로부터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식량 안보의 달성"은 세계적인 최우선 과제이며, 특히 통일의 동반자가 될 북한의 지상과제입니다.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도시화에 따른 주택, 교통, 공해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도 농업, 농촌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잘못된 '변화와 개혁'은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반세기 우리 역사 속에서 배워야 할 교훈 중의 하나는 국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절망과 기아선상의 민생고"임을 재확인하고 농촌지

도를 살리는 일이 경쟁력이나 구조조정 이전의 국가적 과제를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50여년전 우리의 소원이었던 "쌀밥에 고깃국"이 농민들의 땀과 농촌지도 공무원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이루어졌음을 바로 평가하고 현재 북한국민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도 국가적 농촌지도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변화와 개혁"에 국가가 할 일을 허약한 지방 정부에 떠넘긴 농촌지도를 살리기 위해 한번의 구조조정으로 어렵다면 단계적으로라도 국가사업으로 "원상회복"시켜 식량생산, 국토의 균형 발전, 환경보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국가적 과제일 것입니다.

오늘 <밝아오는 새아침>KBS 1R에 교수님께서 제시하신 농촌지도직의 역할에 대한 방송을 잘 청취 하였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큰 감화를 받았으며 보다 현실적인 지도사업 방향을 제시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교수님의 말씀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도사업의 새로운 전기가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개혁의 힘이 되어 주시길 바라오며.....

- 충남 부여군 농업기술센터 농촌 지도
공무원 드림

충남 부여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공무원
여러분께

바쁘신 중에도 이른 아침 <밝아오는 새아침> KBS 1R 들으시고, 친절하신 전화와 전자우편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업 농촌의 발전과 농민의 복리 증진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진정한 애국을 하시는 농촌지도 공무원 여러분께 항상 깊은 감사와 경의 드리오며, 잘 못된 "변화와 개혁"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봉사하시는 여러분께 애국훈장이 수여될 날을 학수고대하면서 한 가난한 교수의 방송 원고 초안

이 작은 위안이 되시도록 붙여 드리며 거듭 존
경과 감사의 뜻 전하오며, 귀 농업기술 센터의
발전과 여러 선생님들께 보람과 영광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00년 5월 22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김성수 드림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우) 441-744

전화: 0331-290-2541 전송: 0331-293-4162

Email: agkss@snu.ac.kr